

18. 다음은 권력형 성범죄에 대한 설명이다. 이에 대한 당원들의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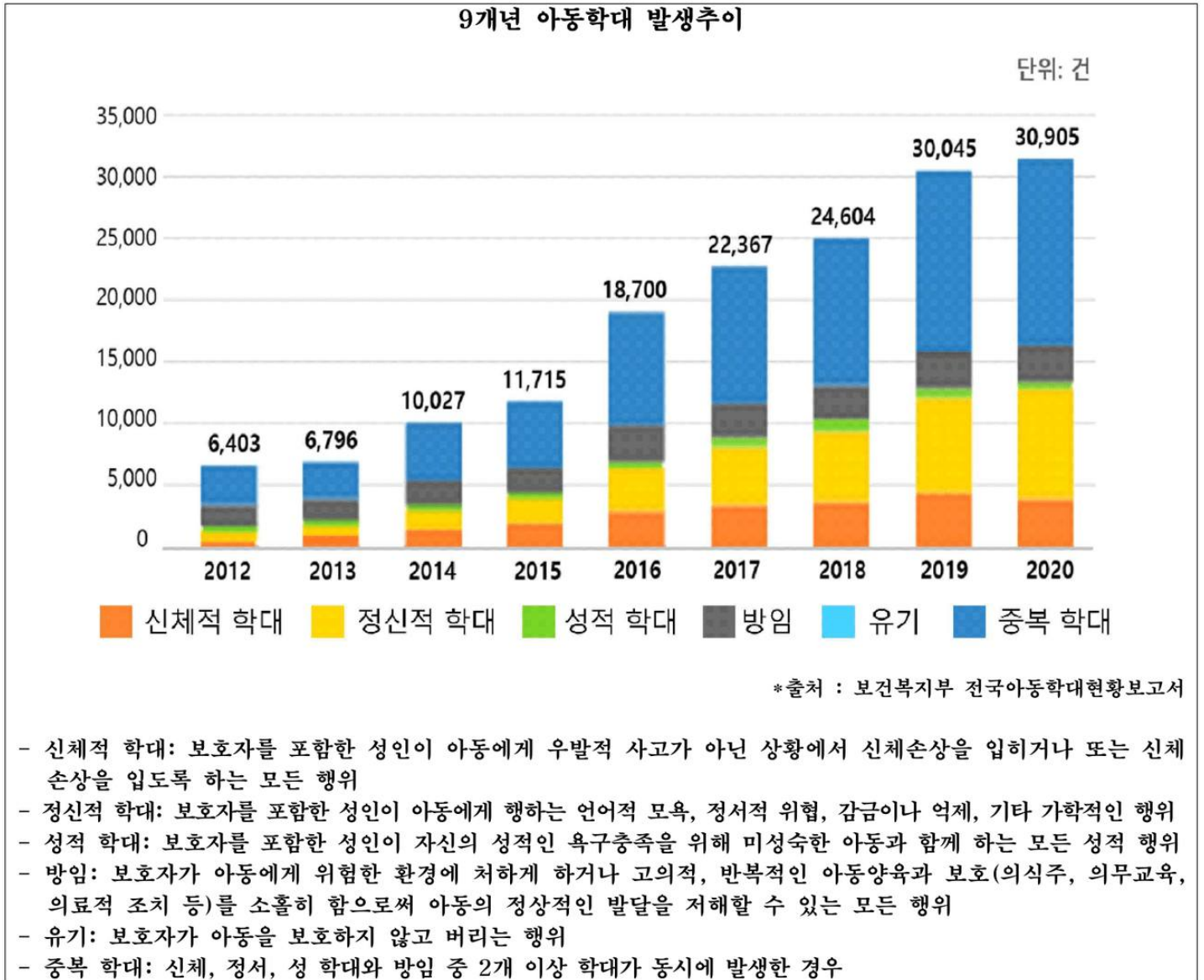
권력형 성범죄란 위계 또는 위력을 이용한 성범죄를 말합니다. 여기서 위계와 위력이란 단어가 중요합니다. 폭력과 마찬가지로 위계와 위력은 다른 사람의 의지를 억압하는 수단입니다. 위력은 자신의 지위 또는 권력 같이 피해자의 자유 의사를 억압할 수 있는 일체의 힘이며, 위계는 거짓으로 계책을 꾸미는 행위 또는 그 계책입니다.

권력형 성범죄는 주로 판단 능력이 미숙하거나 가해자에게 저항하거나 대항할 만한 힘, 지위 등을 갖추지 못한 약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거절하거나, 불쾌감을 표현하거나 신고하는 것이 다른 범죄 피해자에 비하여 어렵습니다.

권력형 성범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신의 힘을 과시하기 위하여 저지르는 권력 과시형과 권력자가 느끼는 외로움과 고독을 호소하며 위로를 강요하는 감정 호소형으로 나타납니다.

- ① 갑수 : 얼마 전 드라마에서 남자상사가 외롭다며 울면서 여자 직원에게 술자리를 같이 하자고 하고, 동침을 강요하는 장면이 나왔었는데, 이런 경우는 권력형 성범죄로 볼 수 없을 것 같아.
- ② 을호 : 권력형 성범죄가 일어나는 이유 중 하나는 권력의 속성 때문이야. 사회적 지위가 높으면 본인 행동에 대한 경계심이 해이해지기 쉬워.
- ③ 병철 : 우리 당은 권력형 성범죄를 막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어. 우리 당의 정강정책에서도 성범죄에 연루된 자는 공직의 진출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히기도 했어.
- ④ 정규 : 권력형 성범죄는 성인지 감수성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야. 내가 자율권을 침해당할 때 느끼는 불쾌감을 타인에게 느끼게 하는 것은 아닌지 생각해 보는 것은 성인지 감수성을 가지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

19. 다음은 보건복지부 전국아동학대현황보고서에 따른 아동학대 발생추이이다. 이를 본 당원들의 대화 가운데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갑준 : 전체적인 아동학대 발생건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이걸,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부분이야.
- ② 을호 : 그렇네. 특히 다른 유형보다 정신적학대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크게 증가한 것 같아. 물리적으로 폭력을 가하는 것만 학대라고 생각하는 건 잘못된 생각이야.
- ③ 병섭 : 아동의 사생활 보호나 학대를 통한 트라우마 등을 생각하면 국가나 우리 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면 아무래도 학대 피해자가 노출되기 때문에 이걸 어디까지나 경찰이나 검찰, 사법부가 해결할 문제야.
- ④ 정우 : 글썄, 우리 당의 <10대 약속> 중 '아동에 대한 모든 형태의 폭력과 학대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고 아동보호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한다.'는 부분이 생각나네. 아동학대를 방지하는 것은 결국 '아이 낳아 키우는 것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 것이고 그것이 곧 '내 삶이 자유로운 나라'가 되는 거라고 생각해.

20. 다음은 헌법과 공직선거법, 정당법 내용의 일부이다. 이를 읽고 잘못된 이야기를 한 사람은 누구인가?

<헌법>

제67조 ④ 대통령으로 선거될 수 있는 자는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고 선거일 현재 40세에 달하여야 한다.

<공직선거법>

제15조(선거권) ① 18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

제16조(피선거권) ② 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

③ 선거일 현재 계속하여 60일 이상(공무로 외국에 파견되어 선거일 전 60일 후에 귀국하는 자는 선거일 명부 작성 기준일부터 계속하여 선거일까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주민으로서 18세 이상의 국민은 그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피선거권이 있다. 이 경우 60일의 기간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설치·폐지·분할·합병 또는 구역변경에 의하여 중단되지 아니한다.

제60조(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2. 미성년자(18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정당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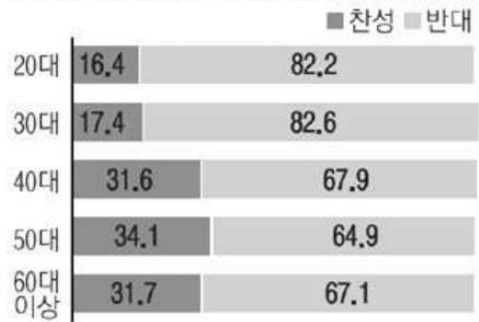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 16세 이상의 국민은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제23조(입당) ① 당원이 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도당 또는 그 창당준비위원회에 입당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18세 미만인 사람이 입당신청을 하는 때에는 법정대리인의 동의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 ① 甲(만 19세) : 나는 국회의원으로 출마할 수 있어.
- ② 乙(만 16세) : 나는 당원이 되기 위해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받아서 국민의힘에 가입할 거야.
- ③ 丙(만 17세) : 나는 국민의힘 당원으로서 대통령 선거에 투표권을 행사할 거야.
- ④ 丁(만 17세) : 나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내가 지지하는 후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어.

21. 다음은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여자 아이스하키 팀의 남북 단일팀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이다. 이를 읽고 나는 대화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사람은?

단일팀 구성에 대한 연령별 반응 (단위=%)



남북 단일팀 참가에 대한 찬반



최근 진행된 여론조사에서도 청와대와 20·30대 젊은 층 간 현실 인식 차이가 고스란히 드러난다. 전국 19세 이상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2018 평창올림픽 및 남북관계 관련 여론조사'에 따르면 '북한의 평창올림픽 참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중 81.2%가 찬성(매우 찬성 40.2%·대체로 찬성 41.0%)의 뜻을 밝혔다.

반면 '평창올림픽에서 남북이 단일팀으로 참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72.2%가 "무리해서 단일팀을 구성할 필요는 없다"고 답했다. "가급적 단일팀 구성이 좋다"는 답변은 27.0%에 그쳤다.

개최국에 주어지는 올림픽 출전권이긴 하지만 북한이 무임승차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정의롭지도 않다는 게 단일팀 반대 여론의 핵심이다. 극심한 취업난 속에서 공정경쟁 이슈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 2030세대는 "공정한 경쟁을 거쳐 만들어진 팀에 정치적 이유로 낙하산 선수를 쫓는 일"이라며 단일팀 구성에 반대하고 있다.

- ① 甲: 젊은 층의 북한에 대한 막연한 반발심이 그대로 드러난 결과라고 생각해.
- ② 乙: 20·30대에서 가장 거센 반대 의견이 나온 것은 공정한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표출된 것으로 봐야 해.
- ③ 丙: 앞으로 정부는 청년들의 공정에 대한 요구를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깊게 고민해야 해.
- ④ 丁: 이번 여론 결과를 통해 국민들이 단일팀 구성이 공정하지 못하다고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음을 알 수 있어.

22. 다음 보도자료를 보고 나는 토론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발언을 한 사람은?

한국경제연구원이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산출한 결과, 올해 상반기 기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는 27.2%로, 2015년(22.2%) 집계 이후 최고치로 치솟았다. 다른 연령층도 올해 상반기 들어 최고 수준을 기록했지만, 그 중에서도 청년층(27.2%)이 전 연령대 중 가장 높았다. 그 뒤를 이어 60대(18.8%), 50대(14.0%), 30대(13.6%), 40대(11.5%) 순으로 조사됐다.

2021년 들어 더 심해진 고용한파가 청년 체감경제고통지수를 이끌었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재취업을 희망하는 자, 경제활동을 하지 않지만 취업의지가 있는 자 등 사실상 실업자를 포함한 '청년 체감실업률'은 올해 상반기 기준 25.4%로, 30대(11.7%)의 2.2배, 40대(9.8%)의 2.6배에 달했다. 청년 체감실업률 추이를 보면, 2015년 21.9%에서 2019년 22.9%로 4년간 1.0%p 올랐다가 2019년 22.9%에서 2021년 상반기 25.4%로 2년 6개월 만에 2.5%p 급격하게 증가했다. 여기에 물가 상승세도 경제적 어려움을 가중시켰다. 청년 물가상승률은 2018년 1.6% 이후 0%대를 유지하다가 2021년 상반기 1.8%로 급등했다.

*세대별 체감경제고통지수 = 연령대별 체감실업률 + 연령대별 물가상승률

- ① 甲: 기업 규제 완화, 고용 유연성 확보 등으로 청년들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게 시급해.
- ② 乙: 단순히 비정규직 일자리를 늘리는 것보다 양질의 일자리로 장기적인 취업을 꾀하는 방법이 필요해.
- ③ 丙: 취업 상담과 멘토링 서비스 등으로 자신과 맞는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돕는 것도 중요해.
- ④ 丁: 청년들의 취업을 돕는 것보다 창업을 권장하여 경제적 자립을 돕는 것이 더 현명하겠어.

23. 지방자치단체는 자치사무를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다. 다음 중 지방자치단체가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해 올바르게 설명한 사람을 모두 고르면?

갑호: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습니다.
을환: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에 따른 사무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습니다.
병규: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세와 분담금 등 재원을 건어 필요한 사업에 적절하게 예산을 편성해 지출할 수 있습니다.
정하: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행정기구나 인사 등 조직을 스스로 정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 ① 갑호, 병규 ② 을환, 정하 ③ 갑호, 을환, 병규 ④ 갑호, 을환, 병규, 정하

24. 다음 중 용어와 그 뜻을 올바르게 매치한 것은?

(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나) 재정자립도	(다) 보조금
---------------	-----------	---------

㉠	내국세의 19.24%를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나눠주는 예산
㉡	자체수입 /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 100
㉢	(자체수입+지방교부세+조정교부금) / 지방자치단체 전체 예산 × 100
㉣	지역 간 교육 발전의 균형을 위해 내국세의 20.79%를 중앙정부에서 지역으로 나눠주는 예산
㉤	중앙과 지방의 매칭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조건이 걸려 내려오는 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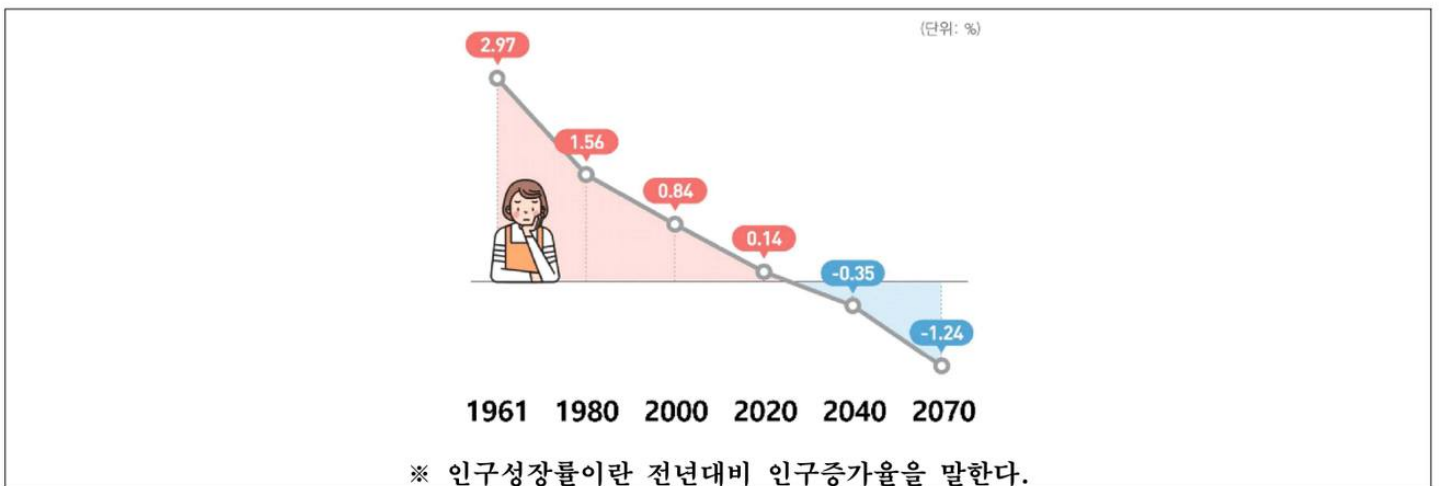
- ① (가) - ㉠, (나) - ㉡, (다) - ㉣ ② (가) - ㉠, (나) - ㉢, (다) - ㉤
 ③ (가) - ㉣, (나) - ㉢, (다) - ㉠ ④ (가) - ㉣, (나) - ㉡, (다) - ㉤

25.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한 지 30년이 지나면서, 그 효과가 매우 크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다. 다음 중 지방자치제도로 인한 효과에 대해 잘못 설명하고 있는 사람은?

갑주:	지역주민과 대표자들이 함께 참여해 공동문제를 처리하므로 국정의 관료화를 견제할 수 있었습니다.
을모:	지역의 특수성과 다양성을 반영하고 지역 주민의 선호를 받아들여 사회경제적으로도 긍정적 효과를 가져왔습니다.
병희:	중앙정부 중심의 행정을 진행할 수 있어 정부 주도의 능률적인 행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정철:	지역실정에 부합하는 행정으로 국가사무와 지역사무의 분업을 통해 효율적 행정이 가능해졌습니다.

- ① 갑주 ② 을모 ③ 병희 ④ 정철

26. 다음 그래프는 대한민국 인구성장률을 나타낸 것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 ① 2020년의 대한민국 인구는 2000년보다 작다.
 ② 2070년의 대한민국 인구는 2040년보다 작다.
 ③ 1980년의 대한민국 인구는 2020년보다 크다.
 ④ 1961년이 전년대비 인구증가수가 가장 많았던 때이다.

27. 다음 중 乙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가장 적절하게 반박하는 甲의 대답은?

甲 : 혹시 제논의 역설을 아세요?
 乙 : 그게 무엇인가요?
 甲 : 아킬레스와 거북이가 달리기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아킬레스는 거북이보다 10배 빠르기 때문에 거북이는 아킬레스보다 100m 앞에서 출발하기로 했어요. 출발하고 좀 지나서 보니 아킬레스는 100m 지점에 도달했지만 이때 거북이는 110m 지점을 지나고 있었어요. 아킬레스가 달려서 110m 지점에 도달하면 거북이는 어디에 있을까요?
 乙 : 거북이는 111m 지점에 있겠네요. 결국 아킬레스는 거북이를 앞지를 수 없네요.
 甲 : _____

- ① 당신의 생각은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추월하기 전까지는 맞습니다만, 아킬레스의 속도가 거북이보다 빠르기 때문에 결국 거북이를 앞지를 것입니다.
- ② 거북이를 앞지를 수 없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거북이는 결국 멈출 것이기 때문에 아킬레스가 거북이를 앞지를 수 있습니다.
- ③ 그렇습니다. 거북이가 아무리 느려도 100m나 앞서서 출발했으니 아킬레스는 결국 못 따라 잡을 것입니다.
- ④ 결국 아킬레스가 이길 것입니다. 심지어 아킬레스가 달리는 속도가 거북이가 달리는 속도보다 느리더라도 결국 거북이를 앞지를 수 있습니다.

28. 다음 글을 근거로 <상황>을 판단할 때, 甲지방자치단체의 조례와 규칙 중 효력이 있는 것만 모두 고르면?

지방자치는 국가의 법질서 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차원의 감독, 통제를 받아야 한다. 특히 국회는 지방자치에 관하여 중요하고 본질적인 사항을 직접 결정해야 한다. 따라서 지방의회가 제정하는 조례와 지방자치단체장이 제정하는 규칙의 형식적 효력은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나 중앙행정기관이 제정한 명령보다 하위에 있으며, 조례와 규칙은 법률과 명령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법률과 명령에 위반되는 조례와 규칙은 효력이 없다. 규칙의 경우 해당지방자치단체 또는 상급지방자치단체의 조례도 위반해서는 안 되며 위반한 경우 규칙 역시 효력이 없다.

아래 규정은 지방자치단체에 관한 헌법과 지방자치법 규정이다.

헌법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종류는 법률로 정한다.

헌법 제○○조 ① 지방자치단체에 의회를 둔다.

② 지방의회의 조직·권한·의원선거와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 기타 지방자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지방자치법 제○○조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 제한 또는 의무 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 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법 제○○조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상 황>

- 甲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주민복리에 관한 조례 A를 제정하였는데, 이웃 지방자치단체인 乙과 다른 내용이었지만 법률과 명령에 위반되는 내용은 없었다.
- 甲지방자치단체의 지방의회는 공석이 된 지방자치단체장의 선임방법을 투표가 아닌 임명방식으로 정하는 내용의 조례 B를 제정하였다.
- 甲지방자치단체장인 K는 그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 C를 제정했다. 규칙 C는 법령에 위반된 부분은 없었지만 甲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 위반되는 것이었다.

- ① A
- ② B
- ③ A, C
- ④ B, C

29. 다음은 국내 산업별 취업현황이다. 이에 대한 분석으로 옳은 것은?

<4개월간 국내 산업별 취업현황>

(단위 : 천 명, %)

구분	2022년 2월	2021년 11월	4월간 증감률
보건업	2.6	2.7	△3.7
농업 등	1.2	1.5	△20
제조업	4.5	4.4	2.2
건설업	2.0	2.1	△5
기타업	11.3	11.3	0

- ① 건설업의 4월간 취업인원 증감률과 보건업의 취업인원 증감률의 차이는 2.6%p이다.
- ② 2022년 2월 기타업에 해당하는 취업인원수는 1백1십3만 명이다.
- ③ 국내 산업 중 2021년 11월 대비 4월간 증감률이 가장 작은 산업은 농업 등이다.
- ④ 2022년 2월에 취업인원 수가 가장 많은 국내 산업은 제조업이다.

30. 다음 글은 명제의 관계 유형을 설명한 것이다. 다음 글을 근거로 판단할 때 <사례>에 해당하는 유형은?

두 명제 X와 Y의 관계 중 대표적인 네 가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함축 관계	명제 X가 참이면 반드시 Y도 참이어야 하는 관계
반대 관계	명제 X와 Y가 함께 거짓일 수는 있지만 함께 참일 수는 없는 관계
소반대 관계	명제 X와 Y가 함께 참일 수는 있지만 함께 거짓일 수는 없는 관계
모순관계	명제 X와 Y가 함께 참일 수도 없고 함께 거짓일 수도 없는 관계

<보 기>

X : 학생은 모두 운동화를 신는다.
Y : 어떤 학생은 운동화를 신지 않는다.

- ① 함축관계
- ② 반대관계
- ③ 소반대관계
- ④ 모순관계

- 수 고 하 셧 습 니 다. -